

상무지구 연료전지 사업규모 절반 축소

소각장 폐쇄 대체열원

민간사업자들 돈줄 막혀

2020년 발전 목표 차질

새 컨소시엄으로 사업 추진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 신에너지 발전 시스템인 연료전지를 통해 상무소각장 폐쇄에 따른 대체열원(代熱源)을 공급하는 사업이 애초 계획의 절반 기량으로 축소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12월 상무소각장 폐쇄에 따라 열 공급을 해 줄 발전시스

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연료전지는 전기화학 방식의 발전 시스템을 말한다.

광주시는 16일 "지난해 9월 두산건설 컨소시엄과 맺었던 1760억원 규모의 실시협약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진척이 없자 사업계획을 축소해 새 컨소시엄으로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상무지구에 공급하는 대체열원으로 연료전지 사업을 추진기로 하고 지난해 공모를 통해 두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애초 지난해 제1하수처리장 유휴부지 1만500㎡에 착공, 2020년 7월 발전 개시가 목표였다. 하지만 경제성 부족 등으로 민간사업자들이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권 대출인 PF에 실패하면서 사

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광주시는 사업 계획 축소를 방향을 바꿨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발전규모를 애초 목표인 26.4MW/h의 절반 수준인 12.3MW/h로 줄이고 사업비도 750억원 정도로 낮추면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료전지의 연료도 도시가스(LNG) 단일화 방식에서 LPG와 LNG 병행방식으로 바꾸면 사업비 절감과 경제성 확보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 규모를 절반 정도로 축소하더라도 열 공급에 큰 문제는 없고, 광주보다 훨씬 큰 부산 해운대의 경우 1년 6개월이 걸렸는데 광주는 1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경제

성을 높였고 기존 발전소들의 참여 의사가 있어 사업전망은 나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PF의 관건이 됐던 다른 발전소들의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구매 약속을 통한 출자도 원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업 규모 과대로 투자를 꺼렸던 발전소 중 일부는 규모 축소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새 컨소시엄에는 두산건설과 민간사업자 1곳, 발전소 1곳도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새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축소해 추진하면 애초 계획했던 2020년 7월 공급 계획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최저임금 8350원 의결 여파

문 대통령 '2020년 1만원' 공약 불발 사과

"세계 등 보완책 마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영계는 감당하기 어려운 인상이라고, 노동계는 문 대통령의 '2020년 1만원' 공약이 물 건너 갔다며 양측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인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도 이어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촛불 계엄령' 실행의도, 여타 부대 전달 여부가 초점

특별수사단 핵심과제 부상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이 실제 실행의도를 가지고 일선 부대에 전달됐는지 특별수사단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핵심과제로 부상했다.

기무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16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문서와 보고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면서 핵심과제로서 비중이 더 커진 양상이다. 다시 말해 문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 등 간에 오간 문서를 직접 훑어 봄으로써 해당 문건이 단순 문서인지 아니면 실행을 염두에 둔 문건이었는지를 판단 하겠다는 상황에서 특수단의 부담이 더 커진 셈이다.

이런 가운데 문서를 작성한 기무사와 이를 보고받은 국방부 이외에 여타 부대에서 계엄령도 문건이 발견되거나 교신한 흔적,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 계획 등이 발견된다면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이 비상 사태에 대비한 단순한 '계획 차원'이라는 주장과 함께 유사시 '실행의도'가 있는 문건이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단은 해당 문건이 실행의도를 가지고 작성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는 데 수 사력을 모아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누가, 왜 작성했는지를 철저히 밝히는 외길밖에 없어 보인다. 세간에서 탄핵 정국을 모면 하려는 당시 박근혜 정권은 물론 군 수뇌 부가 해당 문건 작성과 연관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뚜렷한 답을 내놓아야 하는 부담을 짚고자 할 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부대장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관련 모든 문서와 보고를 제출하라고 한 지시와 관련 김용우 육군참모총장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비롯해 수도방위사령관 등 20여개 부대 지휘관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있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위수령 발령 시 육군총장은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중원 가능한 부대로 기계화 5개 사단(8·20·26·30사단·수도기계화사령부), 특전 3개 여단(1·3·9여단)과 707 특임대대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문건에는 계엄령을 발령해 계엄사령부를 편성할 때는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계엄 수행 군은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 등이 말 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선 계엄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이

외에 여타 부대가 문건을 주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던 '예비내란음모', '쿠데타' 등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걸 근거로 관련자 처벌은 물론 군 전반에 걸친 대수술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물론 기무사, 육군본부, 수방사, 특전사를 비롯한 기무사 문건에 적시된 예 하 부대까지 모두 철저히 관련 문서나 보고 내용을 찾아내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흑산공항 건설여부 20일 결정

흑산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환경부 관계자들이 현지 실사를 마쳤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차례로 흑산공항 건립 예정부지를 실사했다.

오는 20일 사업 추진 여부를 좌우할 국립공원위원회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 심의"를 앞두고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한 셈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

여권·청와대 오늘 최저임금 인상 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7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청 긴급회의를 열고 머리를 맞댄다.

16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강구에 나선다. 당일 회의는 정부의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만큼 광범위한 주제를 포괄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고용주 지원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연장하는 방안과 더불어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

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올해 기준)하는 제도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 인화와 상가임대료 인하 방안을 비롯해 대출 만기 연장, 이자 경감 등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취약 계층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오 이같이 우려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임야·삽니다
당일매입가능, 김태산. 010-9374-8585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펜션·가든 부지 매매

-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사추학의 대가 동광스님비법공개

40년 내공으로 완성한 사추학 비법을 공개합니다

- 사추역학 학당 개설 -

- 일시: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 6시
- 장소: 광주시 동구 대인동 한미쇼핑 2층 (일월사 포교원)
- 대상: 사추학, 역학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 학당에 참석하셔서 새로운 사추학의 비법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교원 (062) 524-8020
원 장 010-8024-1433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 대지 14,916.9㎡, 건물 998㎡(임대 741㎡, 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일부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임대중

◆ 매매가 27억 ◆ (조정가)

인하건설(주)
010-3605-0214
062) 655-4840